

돈봉투까지 등장 6·1지방선거 '불법 난무'

담양·곡성·보성 금품살포 의혹 강력 수사

투표 앞둔 경합 선거지 불법 난무 예상 '감시 강화'

풀 뿌리 민주주의 불리는 6·1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돈봉투까지 등장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선관위 등은 감시를 강화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제공한 운동원 등은 구속 등 강력 처벌할 방침으로 선거 후 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29일 유권자에게 뿌리기 위한 현금봉투를 차량에 보관한 혐의(매수목적 금품운반)로 군수후보 선거사무원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보의 지지를 호소할 목적

으로 15만원이 들어있는 봉투 41개 615만원, 210만원·400만원 봉투 각각 1개 등 총 1225만원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불접 있으며 "현금은 유권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마련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수후보와의 연관성, 실제로 현금봉투가 유권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곡성에서도 군수후보의 선거

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선관위는 3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은 유권자를 조사했으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후보 측은 "선거캠프와 관련이 없는 일이다"며 "조사를 지켜보겠다"고 주장했다.

전남 보성지역에서도 모 정당의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돈봉투가 다량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등은 경합지역의 경우 투표를 앞두고 돈이 뿌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감시망을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 최대 5억원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24일 선관위는 '선거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지불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50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반면 음식·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은 유권자가 도시에 비해 적고 헤연·지연·학연 등으로 얹혀 있어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뿌려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4년전에 비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고발비율이 10%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는 50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제공한 후보 또는 운동원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기자

김영주씨 "5·18 숨은 주역 찾길"

옛 전남도청 항공사진 기증자, 촬영 중 헬기사격도 목격



거친다. 특히 항공 사진은 1980년 5월 27일 계엄 군사의 상무총정작전 당시 옛 전남도청에 계엄군들이 진입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김씨는 28세였던 1973년부터 전남도청 소속 사진 촬영 기사로 근무했다. 그는 5·18 항쟁이 끝난 1980년 5월 27일 부임한 당시 김종호 전남도지사의 지시로 항공 사진을 촬영했다.

5·18 직후 뒤숭숭한 광주·전남 지역 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하는 도정 홍보 자료에 쓰임 사진이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소방헬기를 타고 같은 해 6월 초 옛 전남도청 일원, 전남 여수·순천 산업단지 등을 촬영했다.

그는 5·18 당시에도 옛 전남도청에 출근하며 시민들의 치열했던 열흘 간의 항쟁을 생생히 지켜본 관찰자이기도 하다. 계엄군의 금남로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는 직접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항공 사진 기증 취지를 5·18 당시 활약한 일련의 사건들을 조명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역설했다.

김씨는 "1980년 5월 광주의 역사와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같은 소시민들의 행적이 반드시 조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오월 사형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별세



향년 78세…당시 예비검속으로 2년 여 옥고 특별 사면 후 진실 규명·책임자 처벌 '앞장'

5·18민주화 운동 직전 예비 검속으로 신군부에 의해 내란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 받았던 '오월의 사형수'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별세했다. 향년 78세.

29일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정 이사장이 이날 오전 광주 모처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 이사장은 1964년 전남대학교 종합생회장을 맡았고, 1965년 한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을 이끌다 구속·제적당했다. 이후 사회 생활을 하다 37세였던 1980년 복학했으나 5·18비상계엄 확대 조치로 예비 검속돼, 신군부의 무자비한 고문으로 내란수과 혐의를 뒤집어쳤다.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광주에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군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1982년 12월에서야 성탄절 특별사면 조치로 석방됐으며, 5·18 진실 규명을 비롯한 사회 운동에 협력했다.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에서는

신군부의 고문 수사가 사실이라고 폭로했고, 1995년 검찰의 5·18 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맞서 수사 결과를 검증하며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였다.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민주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장, 이철규 열사 사인규 명대책위 공동의장, 광주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에는 제14대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돼 온전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섰다. 올해에는 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 행사위원회 상임 위원장을 맡는 등 최근까지 항쟁 이후 남겨진 자의 소명을 다했다. /김용범 기자

광주서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

전남에 이어 광주에서도 올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양성환자가 발생했다.

27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26일 복부 통증과 몸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광주 북구)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양성환자

로 확인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4~11월을 맞아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무덤가, 잡목림, 초지 등에서 점검적으로 종 분포와 병원체 보유 양상을 조사하는 등 진드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환자 발생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박종배 기자

전국적으로 13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강원도에서 뒷발작업을 한 후 확진된 60대 여성이 숨졌다. 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4~11월을 맞아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체 발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 무덤가, 잡목림, 초지 등에서 점검적으로 종 분포와 병원체 보유 양상을 조사하는 등 진드기 감시활동을 강화하며 환자 발생 예방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김용범 기자

어서오십시오

전남 맴생이당

예약문의 : 010-3925-3842

농장직영

염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